

퇴직연금 적립금·수수료 등 통합연금포털서 신규 공개

고용부,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 확대 알 권리 강화·사업자 건전경쟁 유도
사업자별 수수료금액 항목 신설 제도별 적립금·계약건수 공시도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금융회사별 적립금 규모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자료를 통해 사업자별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수수료금액 항목을 신규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수료금액' 항목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 위주로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자별로

실제 징수하는 수수료 상세 내역이 공개된다. 이용자는 포털을 통해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판매수수료 및 기타 비용 포함) 등을 합산한 '수수료 총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나 가입하려는 금융회사가 서비스 대비 적절한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 통계 자료의 깊이도 더해졌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각 제도별로 사업자들의 적립금 현황과 계약건수가 상세히 공시된다. 이 같은 데이터 공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별 운영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회사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

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부는 이번 통계 확대에 이어 이용자 편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제공 중인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더해, 오는 4월 중에는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검증을 마친 2025년 말 기준 최신 통계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과 'Open API' 추가를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한정적이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금융사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하반기에는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 개선, 콘텐츠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합천·남원' 농촌특화지구로 재편

개소 당 최대 100억 규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경남 합천과 전북 남원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50억~100억원 규모(국비 50%)를 지원한다. 주거·산업·경관 기능을 집적해 농촌을 생활·산업·관광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합천군의 경우, 반려동물 산업을 중심으로 한 '펫-웰니스'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쌍백면 일대에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데이'와 연계한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구축해 펫푸드 생산·가공·판매는 물론 체험, 숙박, 관광, 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 조성에 나선다. 남원시는 스마트팜과 가공·체험 산업을 결합한 농산업 집적 모델로 차별성을



경남 합천 소재 농업기술센터. /뉴시스

인정받았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와 가루쌀 생산지 등을 연계해 농산물 가공 및 농촌체험 시설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 대상 교육·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공장 철거 및 유희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레isure시설과 힐링공원, 마을공공구관장 등을 조성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선정된 두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만족도 98점... 우수 산재 의료기관 33곳

근로복지소, 우수기관 33곳에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 등 혜택 환자 만족도, 전년비 1.1점 올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3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의료기관 33개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환자가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공단은 인력·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와 치료과정 적정성, 환자 경험 및 만족도 등 8개 영역 2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산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는 98점으로 전년 대비 1.1점 상승

(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현황) /근로복지공단

구분	의료기관명
최우수 (16개소)	든든한병원, 큐병원, 구포성심병원, 21세기병원, 진천신라병원, 서울병원, 새동산병원, 전병원, (의)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 베스트수병원, 대구시티병원, (의)갑을의료재단 갑을녹산병원, 베데스다복음병원, 척척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의)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우수 (17개소)	빌리브세움병원, 김천제일병원(덕산의료재단), (의)장호의료재단녹동대병원, 힘내라병원, 수원버팀병원, 울산병원, 조은마디병원, 목포기독병원, (의)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송호육병원, 검단탑병원, 서울바른척도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인천백병원, 두손병원, 더블유병원, MS재건병원

했다. 공단은 환자 중심 치료 확대와 재활 프로그램 강화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공단은 특히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신암동 '든든한병원'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해당 병원은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의료기관 33곳에는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와 함께 1년간 종별 가산율 3~5% 추가 적용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해 건설업 역성장... 지역경제 둔화

국가데이터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

지난해 전국 건설업 성장률이 뒷걸음질하면서 각 지역경제도 둔화·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역성장의 영향에 전국 경제성장률은 5년 사이 최저 수준인 1.0%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0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실질 GRDP는 전년도에 비해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6%)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GRDP는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실제 생산량 증가만을 반영한 지역경제 규모 지표다. 특히 건설업 부진이 전체 성장세 둔화를 이끌었다.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9.3% 감소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9%로 그나마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충청권과 동남권은 각각 0.7%, 0.2% 증가했고 대경권은 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건설업 부진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호남권은 -0.7%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광업·제조업(7.6%)과 서비스업(2.0%) 증가에 힘입



어 4.4%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서울(2.3%)과 경기(2.0%) 역시 서비스업과 제조업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제주(-2.0%)는 서비스업(-2.1%)과 건설업(-16.5%)이 동반 부진하며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국 5308개 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

고용부, 내달부터 결산서류·정관 조사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기금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전국 5308개소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소속 근로자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장학금 지급,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금법인이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부는 각 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면밀히 분석해 기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

편,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장 감독 실시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단순한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허점 보완에도 착수한다. 노동부는 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점검 항목을 세분화해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사진)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5대 핵심과제' 건설현장 적용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내실화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30일 '건설현장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를 통해 안전 중심의 현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5대 핵심과제'를 작업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작업자가 체감하는 안전조치로 구성했다. ▲공사 특성상 반영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개발·실시 ▲신규 근로자 교육 및 현장 둘러보기 의무화 ▲건설기계 접근규

지 조치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표지 설치를 통해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작업 전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내실화했다. 공사 건설현장은 전국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고,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표준 모형에 공사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활동을 추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